

수출과 재벌기업

김 세 원
(서울대 사회대 교수)

<目 次>	
I. 달라진 경제모습	VIII. 建設韓國의 이미지
II. 미국원조로부터의 탈피	IX. 기업의 成長契機
III. 개발전략의 전개	X. 需要의 側面
IV. 개발계획의 수행	XI. 기업의 肥大化의 불가피성
V. 수출의 神話	XII.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
VI. 수출제일주의의 추구	XIII. 아취운 企業家像
VII. 수출확대의 「딜레마」	XIV. 남겨진 課題들

I. 달라진 경제모습

지난 30년 간 한국경제는 量的, 그리고 質的인 측면에서 크나큰 변모를 거듭하여 왔다. 特히 60년대 初 以後 급속한 成長과 구조적인 變化는 社會全 部門의 발전과정에서 영향을 주어진 결정적인 要因의 하나로 作用하여 왔다.

우선 經濟指標를 通하여 그간 變化를 對比하면 <表 1>과 같은데 7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GNP는 54~82년간 약 6.7배 확대되었다. 62년부터 10년간 年平均 成長率은 9%를 上廻하였으며, 선진제국을 포함한 大多數의 국가가 「제로」 내지는 負의 成長을 변치 못하였던 74~75년간에 있어서도 7~8%에 달하였다. 단지 80년 前年對比 成長率이 -6.2%에 위치함으로써 例外를 이루었다.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1人當 실질 GNP의 年평균 증가율은 54~62년간 1% 內外에 머물렀으나 62년 이후 6%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지속적이고도 급속한 소득증대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量的擴大는 산업구조면에서의 變化를 수반하였다. 即 GNP에 대한 製造業의 구성비는 第1次 5個年 開發計劃이 시작하던 62년까지만 하여도 9%에도 미달하는 수준이었으나 그 후 급격히 확대되어 최근 거의 34%에 이

〈表 1〉 韓國의 主要經濟指標(1954~1982)

	1954	1962	1972	1982	年平均 增加率(%)		
					1954~ 62	1962~ 72	1972~ 82
1. 人 口 (百萬名)	21.8	26.5	33.5	39.3	2.5	2.4	1.6
2. G N P ¹⁾ (10億원)	2,319	3,071	7,366	15,509	3.6	9.1	7.7
1 차 산업 (%)	(51.1)	(45.3)	(29.2)	(19.2)	2.0	4.5	3.3
2 차 산업 (%)	(5.3)	(9.1)	(20.9)	(34.2)	10.8	18.6	13.2
3 차 산업 (%)	(43.6)	(45.6)	(49.9)	(46.6)	4.2	10.1	7.0
3. 1人當 GNP ¹⁾ (달러)	220	239	454	815	1.1	6.6	6.0
4. 1人當 民間消費 ¹⁾ (원)	84,755	100,114	116,388	260,359	2.1	5.2	4.6
5. 投資 및 저축							
總投資/GNP (%)	11.9	12.8	22.2	27.0			
2次産業投資/總投資(%)	17.5	20.6	19.4	15.3			
國內저축율 (%)	6.6	3.3	16.5	22.4			
海外저축율 (%)	5.3	9.5	5.7	4.6			

資料：韓國銀行

註：1) 1975年 不變價格基準.

르고 있다. 또 製造業만을 별도로 보더라도(부가가치 기준) 경공업 對 중화학공업의 구성비는 61년 약 81:19였으나 이제 48:52로 뒤바뀌었다. 따라서 공업화(industrialization)를 “2次産業 中心의 生産構造”로 정의한다면 한국도 거의 선진국 水準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60년대 이후 韓國을 비롯한 일부 開途國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제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경제권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79년 OECD 보고서는 이들을 가리켜 소위 “新興工業國”(Newly Industrialising Countries, NICs)이라 불렀으며 그 以外 “高速工產品輸出國”, 中進國, 혹은 半工業國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어떠한 보고서에 따르면지 後進經濟로 부터 탈피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事例로서 한국이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 미국원조로부터의 탈피

50년대 후반까지만 하여도 韓國經濟는 美國의 무상원조에 의하여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53년부터 61년까지 ECA 및 SEC, CRIK, UNKRA, PL480 그리고 FOA 및 ICA 등 각종 명목의 미국원조는 약 2,146백만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를 한국경제와 연관시켜 〈表 2〉에 종합

〈表 2〉 美國의 對韓經濟援助와 他經濟指標

	1人當 援助 (달러)	원조/GNP (%)	원조/總貿易收支 (%)	원조/對美輸入 (%)
1953	9.59	14.3	—	—
1955	11.05	16.7	73.2	304.0
1956	14.82	22.4	90.4	375.7
1957	16.88	22.9	91.2	349.4
1958	13.77	16.9	88.8	153.7
1959	9.26	11.2	78.2	150.6
1960	9.94	12.3	79.0	183.5
1961	7.90	9.5	73.2	140.6
1953~1961	11.18	15.2	82.0	236.8

資料：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및 統計年報」

함으로써 그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即, 同期間 1人當 平均 被援助額은 11.18달러로써 48~52년간 유럽부흥 계획을 위하여 제공된 「마셜」원조의 경우(약 12달러)와 비교된다. 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과 비교하더라도 평균 2.4배에 해당하는 원조가 供與되며 당시 대의 무역적자액의 80% 이상을 커버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一部에서도 평가하듯이 이러한 원조는 경제자립기반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消費財 中心의 경공업체제를 낳게 하였다. 50년대 방직, 製粉, 製糖 및 革製工業 등의 급속한 발달은 대부분 美國援助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一部는 60년대 들어서서 韓國이 비교우위를 갖는 輸出産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61년 「케네디」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美國의 대외경제정책은 크게 바뀌었으며 韓國 역시 5.16혁명 이후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시도하기 위하여 무상원조 보다는 차관에 의존하게 된다. 차관도 경제원조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상환을 前提로 한다는 點에서 경제개발의 추진에 필요한 財源이 어쨌든 自力에 의하여 조달되기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다.

III. 개발전략의 전개

60년대 初 以後 한국의 개발전략은 供給의 側面에서 볼 때, 한 마디로 국내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자도입의 확대를 통한 外延의 成長(extensive

growth)의 추구였다고 요약될 수 있다. 또 需要의 측면에서 볼 때 수출증대가 경제확장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 등장하였으며, 對外經濟戰略面에서 수입대체에 중점을 두어 온 中南美諸國을 비롯한 大部分 開途國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흔히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과잉인구에 依한 開發模型」으로 비하듯이 개발초기 良質의 무한한 노동공급의 가능성은 성장을 자극하는 原動力의 하나로 作用할 수 있었다. 50년대 후반 실업율이 거의 9~10%에 달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非業農部門(남자)에서 平均 教育年數는 다른 後進國의 경우에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水準인 7年을 상회하고 있었다는 事實은 이를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60년대 初까지만 하여도 1% 内外에 머무르던 고용증가율은 개발의 本格化와 함께 급속히 확대되기 始作하였는데 年 平均증가율은 63~72년간 3.6%, 그리고 72~82년간 3.2%에 각각 위치함으로써 同期間 勞動力 增加率을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고용흡수는 정부 및 민간의 활발한 투자활동에 依하여 이루어졌는데 총투자율은 54년의 11.9%에서 第1次 開發計劃期間인 62~66年間 21.6%로 提高되었으며 第3次 計劃期間中(77~81年) 31.2%에 이르렀다. (<表 1>참조) 최근 다소 하락하여 27% 水準에 머무르고 있다.

투자재원의 조달은 60년대 개발초기 외자도입에 크게 依存하였는데 당시 총투자에 대한 국내저축의 구성비는 50%에도 未達하였다. 그 후 국내저축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자재원의 자립도는 70년대 후반 한 때 90%에까지 이르렀으나 최근 80% 内外에 위치함으로써 外資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성장전략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기본적인 수단이 경제개발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미 6.25 동란 때 부터 주로 외국원조 기관에 依하여 개발계획이 作成이 시도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例가 戰後 經濟復興을 위한 「네이산」(Nathan)計劃이라는 명칭 아래 발표된 5개년 계획(54~58年)이었다.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後 自由黨政權下에서 7개년 계획, 그리고 民主黨政府 當時 5個年 계획이 작성되었으나 햇빛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5.16 혁명 이후 공화당 정권이 수립되면서부터 本格的인 정부주도

형 개발계획이 시작되었다.

IV. 개발계획의 수행

사실, “시장”과 “계획”이 갖는 배타성 때문에 市場經濟體制下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制約이 다르며 또 운영면에서도 고도의 신축과 기술이 必要하다. 선진제국 중에서는 프랑스가 유일하게 개발계획을 실시하여 오고 있는데 유인적 계획(indicatif planning)이라는 명칭이 말하여 주듯이 국민경제 활동을 바람직한 方向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유도하는데 그 위치가 두어지고 있다. 또 기능별, 부문별로 수직적, 및 수평적인 次元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각 지역수준에서의 자료와 전망이 中央으로 집결되는 上向式 方法이 택해지며, 나아가 국회의 表決에 회부되는 이른바 국민적 계획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처했던 여러가지 제약에도 기인하겠으나 개발계획의 실시 초기 정부주도에 의한 간섭주의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부는 제한된 투자재원의 조달에서부터 配分에 이르기까지 크게 간여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통제 또는 稅制, 金融, 外換 등 諸 側面에서의 特惠提供이라는 방법이 취해졌다. 따라서 시장기능을 提高하고 시장기구에 맡겼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제 폐해를 수정한다는 개발계획의 유인적 및 보완적 기능은 당초부터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투자재원의 制約, 의욕적인 공업화 및 輸出主導型 成長 등에 대한 편향은 불균형성장전략의 추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업부문보다는 공업 부문에, 수입대체 및 內需産業보다는 수출산업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그리고 특정 小數地域에 집중투자되었으며 또 이를 자극하는 정책수단이 동원되어 왔다. 이른바 成長軸에 해당하는 先導部門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연 관효과와 과급을 확대하자는 의도였다고도 할 수 있다.

강력한 정부주도에 의한 개발계획은 70년대 중반 第4次 計劃(77~81)에 준비될 무렵부터 그 限界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는 또 韓國經濟가 거의 완전고용의 수준에 이룸으로써 종래의 성장전략을 바꾸어 생산성의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보다 집약적 성장(intensive growth)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時期와 일치하기도 한다. 민간부문의 肥大,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그리

고 정부능력의 제한 등 제요인이 시장기능의 강화 또는 민간주도형 경제에로의 이전 등을 강조하게 한 것 같다.

물론 소유양식, 경제적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 「메카니즘」에 있어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시장기구에만 의존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는 없으며, 自國의 여건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혼합,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要는 어떠한 운영방식을 택하든지, 정책당국이 확고한 철학과 신념 아래 제시한 명분과 실체가 일치되어야 함은 물론 각 집단의 의사가 반영, 그리고 수렴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됨으로써 시장경제체제가 갖는 본래의 속성과 장점이 살려져야 한다.

경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및 민간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구분은 아직껏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V. 수출의 神話

60년대 초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었던 국가가 한, 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중요한 動因의 하나는 강력하고도 집결된 開發意志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開發意志나 「하면 된다」는 式의 구체적인 표현은 수출 확대에 나타났다.

수출은 70년대 중반까지 성장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등장하였으며 곧 바로 국내경기와 연결되었다.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최근까지도 거의 40%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의 경우 한 때 50%의 수준까지 달한 적이 있으나 평균 15~20%에 위치하고 있다.

60년대 이후 12년 간 年평균 수출신장율이 거의 40%에 이룸으로써 국제 경제에서 기록을 남겼고 또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추구를 통하여 신흥공업국의 지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수출은 한 마디로 한국경제의 「다이너미즘」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50년대 후반까지만 하여도 한국의 수출총액은 年평균 4천만 달러 이내였으며 그나마 상당한 기폭을 나타내었다. 당시 가장 핵심적인 품목은 重石이었으며 그 이외의 <表 3>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농·수산물등 일차 상품이 주종을 이루었다.

제 1 차 개발계획이 작성되면서부터 수출증대가 강조되고는 있으나 보다

〈表 3〉50年代 輸出主宗品과 그比重

	品 目 및 種 類 (%)					(計)%
1953	重石(43.9)	김(6.9)	生絲(6.3)	寒天(4.9)	鮮魚(4.8)	66.8
1955	重石(31.8)	生絲(9.8)	寒天(5.6)	黑鉛(5.6)	豚毛(3.8)	56.9
1960	重石(14.2)	쌀(11.5)	鐵鑛(7.5)	綿織物(7.4)	鮮魚(4.7)	45.3
1961	重石(11.0)	鐵鑛(10.4)	生絲(6.9)	生豚(6.1)	乾魚(6.1)	40.5

〈資料〉韓國貿易協會.

국제수지의 개선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음을 볼 수 있다. 동 계획기간중 수출이 豫想外의 호조를 나타내자 정책당국은 自信을 얻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국제적인 次元에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까지 수입대체를 통하여 개발을 추구하여 왔던 대다수의 후진국이 UNCTAD의 설립(64년)을 계기로 「원조가 아니라 수출확대」에 의하여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의욕을 과시하였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第2次 계획부터는 「수출을 통한 공업화의 促進」이 극히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욕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64년 이후 수출계획에 비하여 실적이 매년 거의 例外없이 크게 앞질러 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심지어 70~71년간 수출실적은 당초 계획의 2~2.5배에 이르렀으며 73년과 같은 경우 前年對比 수출증가율은 98.6%를 기록하였다.

VI. 수출제일주의의 추구

한국이 그간 대외지향적 工業化를 추구하여 왔다고는 하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輸出增大라는 수단을 중심으로 대외 경제거래가 전개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수출의 급속한 증대는 수출산업 자체의 육성 이외에도 시설재 및 기술의 도입, 그리고 시장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 등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공업화에 거의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특히 「시장확대」라는 측면은 수입대체정책에 비하여 커다란 利點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시장협소 및 자원(천연자원, 기술 및 자본 등)부족이라는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면 된다」는 式의 의욕이 加味하여 수출주도형 成長戰略이 채택되기는 했으나 좋은 노동공급 조건이 이를 가능케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통적인 높은 교육열의 덕택으로 低價의 풍부한 그리고 教育받은 노동공급은 韓國으로 하여금 70년대 중반까지 노동집약적 部門에 있어

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음, 금융, 시설재 및 원자재 수입, 외환, 그리고 재정 등 제측면에서 수출기업에게 제공된 온갖 특혜는 기업인들을 자극하고 활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하였다. 수출제 1주의가 등장하였고 수출이 성장의 촉진이나 공업화, 궁극적으로는 국민복지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상당한 비용을 치루더라도 달성해야 할 하나의 목표로 誤認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이다. 이른바 「목표달성」위주의 경제정책이 운영됨으로써 이와 병행하여 경제 내에 부작용 역시 그만큼 누적되고 있었다. 그 결과 50년대 중반 이후 약 30년간 절대 수출규모가 거의 440배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경상 가격 기준) 그 구조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었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工產品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62년의 27%에서 66년 62%로 그리고 70년대 초 이후부터는 9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第3次 계획(72~76)이 시작되면서부터 중화학공업부문의 輸出産業化가 강조되었다. 즉, 경공업부문의 경우, 50년대부터 60년대 초까지 많은 品目에 있어서 수입대체과정을 거쳐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나 중화학공업의 경우 허다한 부문이 수출을 전제로 설립되었다.

제조업부문의 輸出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表 4>에서도 보듯이 70년대 후반 50%를 넘어섰으며 80년대 초 기계부문에 수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단일 品目を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까지 섬유류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는 하나 그 이외 선박, 철강 및 전자제품의 구성비가 거의 25%에 이르고 있다.

<表 4> 製造業部門의 輸出構造

(단위 : %)

業種別	年度	1975	1981	1982	1983
輕 工 業		61.4	47.4	42.7	38.4
飲 食 料 品		7.3	4.3	3.1	2.9
織 維		37.3	27.8	25.3	22.5
其 他		16.8	15.3	14.2	13.0
重 化 學 工 業		38.6	52.6	57.3	61.6
化 學		11.8	11.3	10.7	10.9
金 屬		8.0	15.4	15.2	14.5
機 械		188.8	25.9	31.5	36.1
工 產 品 計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VII. 수출확대의 「딜레마」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과거 노동집약적 경공업 中心의 수출정책에 서와 마찬가지로 최종재의 조립, 가공에 치중한 생산·수출은 그만큼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소홀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투입 원자재, 중간재 및 素材의 對外輸入依存度を 동시에 확대시켜 왔다. 따라서 수출의 증가와 함께 수입의 확대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도 작업하고 있다. (<表 5>참조)

이와 같이 수출이 급속히 증대될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는 국제수요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 대상지역인 선진제국이 60년대 史上 최대의 호황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후진국으로서의 예외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수출에 대한 직접보조를 비롯하여 갖가지 특혜조치의 공여가 용납될 수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 국제불황을 거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고용 및 국제수지 방어를 목적으로 新보호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은 후진국을 졸업하여 중진국으로 발판은 굳히고 있음이 自他에 의하여 公認되었다. 이제는 선진제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국제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국제수요의 장기적 침체와 보호주의적 추세를 맞아 한국의 수출정책은 새로운 轉機를 모색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또 70년대 후반 이후 수출증

〈表 5〉 年度別 輸出入推移(通關基準)

(단위 : 百萬달러 %)

	輸 出		輸 入		貿 易 收 支
	金 額	前年對比 증 가 율	金 額	前年對比 증 가 율	
1962	55	34.1	422	33.5	-335
65	175	47.1	463	14.6	-240
70	835	34.0	1,984	8.8	-922
75	5,081	13.9	7,274	6.2	-1,671
80	17,505	16.3	22,292	9.6	-4,384
81	21,254	21.4	26,131	17.2	-3,628
82	21,853	2.8	24,251	-7.2	-2,594
83	24,445	11.9	26,192	8.0	-1,655

資料 : 한국무역협회.

가을의 둔화가 단순히 이상과 같은 국제경제적 환경의 변화에만 기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다른 비슷한 여건 아래 있는 중진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명확히 드러나며 이러한 의미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수출구조의 재편성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VIII. 「建設韓國」의 「이미지」

다른 한편 그간 한국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여 왔다면 상품수출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였으나 그 이의 建設輸出의 역할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특히 輸入原油에 대한 非彈力的인 높은 의존도로 因하여 韓國經濟가 석유파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충격은 對中東 建設輸出의 급속한 팽창에 의하여 크게 「中和」될 수 있었다. 건설수출의 경이에 가까운 놀라운 확대는 60년대 이후 상품수출의 증가와 함께 대외적으로 한국경제의 「다이너미즘」을 대변해 주는 또 다른 요소로도 지적될 수 있다.

73년 10月 第1次 原油價 引上이 계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한국의 건설수출은 이미 65~66년경 부터 東南亞市場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受注額을 기준으로 한다면 66년 11,003천 「달러」로 비롯되었으며 72년까지 累積額 233백만 「달러」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내에서 이루어졌다. 即, 50년대 UN軍需施設을 위시한 일부 國內工事,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따른 대규모 社會間接資本 部門 및 施設投資, 그리고 월남,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 東南亞市場內 건설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通하여 공급능력을 축적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前年對比 海外受注增加率을 살펴보면 75년 220%를 기록하였으며 76년 200%를 고비로 다소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79년을 제외한다면 매년 경제성장율은 물론 상품수출의 伸長率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75~82년의 기간을 기준한다면 年평균 해외건설수주 증가율은 경제성장율 및 수출증가율의 약 9배 및 3배에 각각 해당한다.

한마디로 건설수출이 그간 韓國經濟에 미친 效果는 국내시장의 협소와 같은 제약을 解消해 준다는 點에서 총체적으로 商品輸出의 경우에 비교될 수 있다. 그 이의 工事의 내용에 따라 기술 숙련 및 단순노동 등 다양한 「서비스」의 직접 수출이 가능하므로 보다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총체적으로 볼 때 75년 이후 해외건설 「붐」은 소득증대, 국제수지개선, 고용확대, 기업의 대형화 및 시장다변화 등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자극해 온 중요한 動因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美國의 ENR社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82년 海外進出業體數는 물론 世界 建設受注總額에 있어서도 한국의 비중이 거의 14%에 이룸으로써 美國 다음으로 2位로 부상하고 있다. 輸出立國과 함께 「建設韓國」의 「이미지」를 세계에 부각시킴으로써 또 다른 하나의 神話를 남기기에 족하다고 본다. 한편, 부정적인 次元에서 7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진행된 해외건설 「붐」은 방만한 통화관리 정책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인플레이」를 야기시켰다. 또 일부 업자에 의한 대규모의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81~82년 연평균 受注額 135억 달러 内外를 분기점으로 건설수출은 83년 10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전망은 계속해서 밝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이 油價下落에 따른 中東諸國의 輸出所得 減少나 自國化政策의 확대에도 기인하고 있으나 그 밖에도 국내 建設輸出構造에도 큰 문제가 있다. 몇개 中東產油國에 대한 거의 排他的 進出, 국내업자간 과당 진출 및 土木工事 및 住宅 등 단순공사 中心의 偏向輸出과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들 수 있다. 한 예로 83년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을 기준으로 할 때 「사우디」 1個國이 총 누적액에서 65%를 차지하고 또 59개의 施工業體中 49個社가 同國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과당경쟁은 덤핑의 소지를 유발하고 그 결과 不實工事, 수익률하락 또는 未收金 增加등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 건설수출이 本格化한 이래 그 구조를 보더라도 단순공정의 노동집약적 공사가 계속해서 80% 이상을 차지하여 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 한국은 現地國이나 다른 後進國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한마디로 상품수출이나 건설수출이 거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전환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나왔다.

IX. 기업의 成長契機

60년대 初 이후 韓國經濟의 급속한 量的 擴大가 국내 풍부한 良質의 노동

력, 그리고 外資 및 技術導入을 바탕으로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을 통하여 가능하였다는 사실은 자주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初期 이와같은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성공적으로 개발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한국, 固有의 精神的, 文化的 遺産에 대하여는 아직도 論難이 거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章들에서 論議되겠으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어떠한 동기에서든 活力에 넘치는 한국적 기업활동이 成長을 유도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原動力이었다는 點이다. 개발과정에서 그나름대로 한국적인 기업풍토가 造成되고 的욕적인 생산활동의 확대는 곧 경제성장을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다.

기업활동의 최대목표가 利潤追求임은 재언의 여지가 없거니와 과거 30년간을 되돌아켜 볼 때 기업의 생성과 발전을 자극한 몇 가지 계기를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6.25동란 후 재건과정에서 최초로 자본축적에 기여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援助였으며, 오늘날 일부 재벌기업의 母體인 소비재산업이 기반을 굳힐 수 있었던 시기에도 해당한다. 製糖, 製粉 및 「시멘트」의 소위 3분산업을 비롯하여 방직, 유리, 피혁 그리고 비료 등의 단순가공 산업이 갖가지 형태의 미국 원조에 依하여 형성되어 나갔으며 당시 物資不足으로 因하여 內需가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었다.

또 이와 함께 戰爭景氣에 따른 軍納도 建設部門을 비롯하여 타이어, 식료품, 피혁, 섬유 및 「라디오」 등 일부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확대를 가져 왔다.

두번째의 계기는 外資導入, 特히 차관 도입에 의해서 마련되었는데 그 始發은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뀐 최초의 例라 할 수 있는 DLF 재정차관협정이 라 할 수 있다. 59~61년간 그 규모는 약 2천 2백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시멘트 및 「나이롱」산업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외자도입은 6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개발계획의 출범과 함께 本格化하였으며 기업의 형성 및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연평균 외자도입규모를 살펴보면 第1次 計劃期間中(62~66년) 242백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第2次 期間中(67~71) 783백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후 중화학공업화에 박차가 加해지는 第3次 期間中(72~76년) 1,978백만 「달러」로, 그리고 第4次 期間中(77~81) 5,844백만 「달러」로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하였고 82년 한 해 만도 거의 7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67년 以後부

터는 평균적으로 GNP의 1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그 制度面에 있어서도 60년대 초기 다양한 法律이 66년 「외자도입법」으로 통합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 졌다. 물론 이와같이 외자가 순조로이 도입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공급에 의하여 그만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原論的인 측면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물가 및 금리의 격차 그리고 국내 왜곡된 금리체계 등에 의하여도 크게 그 수익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제껏(81년 까지) 외자도입 누적총액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다른 開途國의 경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은 5.7%라는 사실도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의 폭을 말하여 주고 있다.

여하간 이러한 여건 아래서 차관은 커다란 利權이 아닐 수 없었으며 동시에 60년대초 공업기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직결되었다. 경공업 부문 以外에도 電子, 自動車, 精油 및 철강을 비롯한 중화학 공업부문도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X. 需要의 側面

셋째, 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야말로 기업의 급성장을 가져 온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나 「한건 하면 올라선다」는 式의 풍조를 불러 일으킨 것도 바로 수출이며 수출을 자극한 것은 갖가지 특혜에 依한 「인센티브」제도였다. 60년대 중반부터 거의 10년 간은 그야말로 수출의 시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내 자원은 수출산업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금융재정, 수입정책, 외환 및 환율 등 체측면에서의 직·간접적인 보조조치에 의하여 유도되었다. 이러한 지원책은 7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인 壓力은 물론 국내 산업구조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점차 간접적인 유인조치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여하간 60년대 초 以後 제조업부문에서 주종을 이루어 온 섬유류, 합판, 전기기기 및 신발류의 수출은 그야말로 경이적인 속도로 확대되었는데 61~71년간 수출증가 倍數를 비교하면 각각 224倍, 102倍, 646倍 및 2,080倍에

해당한다.

70년대 들어서서 소위 「戰略産業」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정책이 추진되면서부터 기업은 급속히 대형화하였고 오늘날 재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막대한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과 경공업부문에 있어서와는 次元이 다른 대규모의 특혜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고 市場의 협소로 인하여 설립 초기부터 대부분 輸出이 되었다. 따라서 중화학 공업부문은 설립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수출지원 그리고 차관배정 등 2重, 3重의 정책적 육성책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제성 보다는 의욕이 앞섰고 그 결과 不實企業, 경제불안 및 下健全한 기업풍토 등 적지않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가져왔고 결국 80년대 초 以後 중화학공업부문의 정리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여하간 70년대 초부터는 경공업제품 以外 전자제품, 철강제품, 선박류 금속제품 및 합성수지제품 등이 중요 수출상품으로 登場하였다. 75~83년간 이 품목들의 수출규모는 각각 6.7倍, 10.7倍, 27.1倍, 4.4倍, 및 6.7倍로 증가하였다. 82년부터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제품이 10大 輸出品目으로 추가되고 있다.

끝으로, 이상이 해외요인에 의하여 국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도 특히 70년대 중반이후 국내 소득의 증대에 따른 內需의 확대 또한 이에 기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83년의 경우 人口 4천만 및 1人當 GNP 1,877 「달러」(80년 가격 기준)의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도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시장확대의 효과는 家電製品, 의류 및 일부 기기류를 포함하는 내구성 소비재 또는 식료품 등에 있어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內需의 擴大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이는 동시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됨으로써, 경쟁이 차단되었다는 데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84년 7월 부터 수입자유화율이 84.8%로 提高된다고는 하나 국내 소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 소비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 허용된다 하더라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나아가 이들 품목의 대다수가 독과점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대부분 수출부문이라는 사실이다. 70년대 후반 이후 외국에서 「덤핑」是非를 일으켜 온 많은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간

정부의 지원책과 소비자의 高價支拂과 같은 2重 보조에 의하여도 아직껏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유치산업보호론에 입각하더라도 再考의 여지는 너무나 크다.

XI. 기업 肥大化의 불가피성

이상과 같은 諸要因들은 일부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最短時日內 大財閥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었다. 西歐나 美國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오늘날의 「자이바쓰」가 형성되기까지에는 明治維新 이후 100여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히 경이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만하다. 소위 10大財閥의 역사 역시 불과 15~30년 사이에 위치하나 80년대 초부터는 거의 전부가 世界 500大企業에 열거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이 짧은 기간내 기업이 大型化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쟁과 같은 꾸준한 경제적 훈련과정 보다는 經濟外的인, 정책적인 자의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는 특징은 불가피하게도 보인다. 6.25동란 후 復舊, 그리고 60년대 初 기업이 거의 全無한 狀態에서 개발의 주역을 담당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부문을 定着시키자니 당연히 「보이는 손」에 의한 市場介入이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정부가 資源을 동원하고 배분에까지 간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當時 기업의 생성을 순수하게 市場「메카니즘」에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였다고 생각된다. 단지 장기적인 次元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에 입각한, 그리고 진전한 기업풍토의 造成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충분히 남기고는 있다.

이러한 여건 아래서 기업들은 기회만 포착하면 자연스럽게 확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 不均衡的 成長을 추구하다 보니 정책方向에 맞는 기업은 다른 기업이 누리지 못하는 特惠를 누리게 되고 또 실질적, 형식적인 新參企業의 進入장벽은 누적적으로 재벌기업의 大型化에 기여하였다.

한 例로 제조업부문에 있어서 종업원 500人 이상의 대기업이 國內 총 사업수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63년 0.5%에 불과하였으나 72년 1.3% 그리고 82년 1.5%로 증가하였다. 반면 50人 以下 小企業의 경우 同期間 구성비는

각각 92.4%, 88.3% 및 81.5%로 계속 하락하여 왔다.

기업의 肥大化 傾向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의한 기여를 통하여도 알 수 있다. 한 예로 500人 이상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부가가치 년평균 增加率은 60년대 初 이후 약 20년간 38~39%에 위치하는데 同期間 경제성장율의 거의 4배에 해당함으로써 이들에 依하여 주도되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XII.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

국내 기업풍토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현재 대기업의 대부분이 초창기에서 부터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오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지원책 이외에도 部分的으로는 국내시장의 협소로 因한 資本效率性 提高의 必要性 및 과당경쟁의 止揚 등을 이유로 다른 경쟁기업의 참여가 제약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輸入制限 역시 外國으로부터의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市場構造를 보다 非競爭化하여 온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表 6>은 12년간 商品市場構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독과점化의 傾向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即 81년 현재 상품수에 있어서는 82.1%, 그리고 출하액을 기준으로 할 때 66.6%가 독과점 아래 있다.

독과점이 경제에 주는 피해가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기술개발이나 규모의 경제효과 등을 통하여 국민복지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국내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쟁은 독과점이 과연 어떠한 費用을 치루며 형성이 되었느냐는 점 이외에도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表 6> 상품시장 구조

	독 점		복 점		과 점		경쟁		계	
	상품수	출하액	상품수	출하액	상품수	출하액	상품수	출하액	상품수	출하액
1970	442 (29.6)	110 (8.7)	279 (18.7)	204 (16.3)	495 (33.2)	439 (35.1)	276 (18.5)	498 (39.9)	1,492 (100.0)	1,253 (100.0)
1981	521 (23.5)	4,878 (11.0)	211 (9.6)	2,070 (4.7)	1,085 (49.0)	22,500 (50.9)	397 (17.9)	14,735 (33.4)	2,214 (100.0)	44,183 (100.0)

(자료) KDI

〈表 7〉 기업규모별 출하액 및 부가가치에 대한 구성비

사업체規模 (종업원수)	5~49人	50~99人	100~199人	200~499人	500人이상	
1963	33.6	11.8	10.9	13.5	30.3	
67	23.2	8.7	8.6	18.2	41.3	
出 荷 額	72	12.3	6.6	9.2	20.5	51.2
77	8.3	6.3	9.0	19.8	56.6	
82	9.2	7.3	9.7	16.8	56.9	
1963	29.2	10.3	10.2	14.2	36.1(5.1)	
67	21.9	7.9	8.0	19.8	42.4(7.7)	
附 加 價 値	72	12.2	6.5	8.9	18.3	54.1(12.7)
77	9.1	6.7	9.5	18.6	56.1(19.1)	
82	10.5	7.6	9.9	17.1	55.0(20.5)	

註: ()안은 GNP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
 <자료> 경제기획원, 「광공업센서스」.

실현하고 있느냐는데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다음 대기업의 급속한 비대화는 경제력의 과잉집중이라는 현상을 가져왔다.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63년 이후 국내 출하액이나 부가가치생산에 있어서 대기업의 비중은 급속히 확대하여 오고 있다. 이들의 부가가치 생산 총액을 GNP에 대한 구성비로 비교하면 63년의 5%에서 82년 20.5%로 팽창하였다. 또 82년 상위 30대 대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총액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였으며 10대 기업의 경우 11%内外에 달함으로써 경제적 집중의 정도를 말하여 주고 있다.

물론 輸出代行業務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75년 종합무역상사가 탄생할 당시 5個社가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백분비는 13.3%에 불과하였으나 82년(10個社로 증가) 48.2%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기업의 수출을 포함시킨다면 中小企業의 총 수출에 대한 구성비는 同期間 35%水準에서 22.3%로 하락하였다.

경제력의 집중과 관련하여 자주 논란의 대상으로 등장하여 온 문제점 中の 하나는 소위 「문어발」式 확장이다. 기업의 근본적인 생리가 이윤추구를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한다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확장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要는 市場「메카니즘」의 순리에 따르지 않고 과욕적으로 무리하게 산하 계열 企業群의 數를 水平的으로 수직적으로 증대시켜 나간다는

〈表 8〉 주요재벌산하 企業體數

재벌수	年度	1973	1975	1977	1984
5		43	54	81	108
10		80	104	150	194

〈자료〉 중요 日刊紙

데서 非難의 소지를 찾아 볼 수 있다. 자기자본이 不實한 재벌기업이 負債의 압력을 느끼면서까지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不動產 投機 및 금융기관의 지배에 관심을 갖는다는 또는 專門化에서 오는 利得을 유도해야 할 대 기업이 단기적인 이윤에 집착하여 中小企業의 活動領域을 장악하려 한다는 예는 그 일부에 不過하다.

84년 10大 財閥그룹이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계열기업수는, 학교,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비영리 團體를 제외하더라도 194個에 이른다. 이를 73년의 1財閥當 80個에 비하면 2倍를 상회하고 있다.〈表 8〉

이러한 경제력의 집중은 다른 선진 資本主義諸國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水準이다. 소득불균형의 심화에 따르는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감은 물론 이기심에만 입각한 不健全한 기업풍토의 造成, 기업경영의 不實化 및 경쟁력의 弱化 등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逆機能的으로 作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XIII. 아쉬운 企業家像

그간 대기업들이 경제성장이나 고용확대에 기여하여 온 점 재언의 여지가 없으며 또 수출주도의 주역들이기도 하다. 나아가 다른 자본주의 제국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의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적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사실 선진자본주의 제국의 경우에 비하여 국내 기업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특수한 立場에 있는 것 같다.

물론 재벌기업의 形成 및 발전과정에 있어서 창의, 혁신, 근면 또는 성실 등 「베버」나 「슐레터」가 지적한 이른 바 자본가의 윤리적 덕행 및 속성이 크게 作用하였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보다는 더 크게 발휘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거 30년 간 대기업의 탄생이나 확대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援助配定, 輸入許可, 借款導入, 輸出支援 및 輸入制限과 같은 정책적 要因들이라는 點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요소들이 기업활동을 더욱 자극하였음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이나 경제부문에 비하면 결국 특혜라 할 수 있고 또 그 費用은 결국 사회구성원 전체가 부담하여 왔다.

한편, 한국적인 여건아래 초기 기업의 정책적 育成이 불가피하였다는 點 充分히 이해되어야 하나 반면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업풍토의 조성에 反作用하여 왔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생리라 할 수 있는 이윤추구나 자기 확대가 근본적으로 창의 및 혁신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됨에도 不拘하고 보다는 경제外的인 측면에서 정책이나 특혜에 더 크게 依存할 수도 있다는 타성이 만연되고 있다는 點이다.

그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오고 있는 一部 大企業의 과도한 행위는 따지고 보면 과거 성장과정에서 누려온 정책적 혜택에 대한 타성과 이기주의의 式思考에 복합적으로 기인한다고 본다. 對內外的으로 과다한 負債, 무리한 重化學工業部門 시설확충 등이 前者에 屬한다면 부동산 투자, 中小企業 制品市場 支配, 金融業 進出, 無理한 (소위 「문어발」式) 확장 등은 後者の 例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행위가 시장경제를 擇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독과점도를 가져오고 또 몇 개의 재벌기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화시키는 큰 要因으로 作用했다고 생각된다. 또 시장기구를 바탕으로 민간주도형 경제가 定着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은 하면서도 진전한 기업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限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사실 시장경제가 特有的의 利點을 바탕으로 소망스러운 方向으로 운영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양식에 입각한 기업가의 活動이 전제되어야 하나 一部 재벌기업의 무절제한 행위는 때로는 社會不信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第5卷 3호) 설문을 통하여 직업별로 「신인도 종합지수」를 비교한 결과 재벌이 가장 낮은 負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영해주는 하나의 例라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財閥企業의 방만한 행위가 大企業 全體의 행동으로 과장되어서

는 안되며,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例外的인 不條理현상은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서 大企業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어떤 原則에 입각하여 생산활동을 하느냐는 점이며 또 사회구성원들이 이들로부터 느끼는 인식의 내용이라고 본다. 卽 大財閥로 성장한 기업들이 다른 어떤 要因들 보다도 꾸준한 창의, 혁신, 근면, 성실 등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인식이 지배되고 社會的으로 존경받을 수 있을 때 시장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成長의 잠재력이 배양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고 기업은 자선사업체나 복지단체가 아니며 따라서 사유재산의 사회환연이나 국가헌납 또한 논의 될 수도 없다. 단지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주어진 사회여건 아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때 동시에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킨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한국적 기업의 생성 및 발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역할은 그 어느 경우보다도 더욱 강조된다.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기본적인고도 간단한 論理와 倫理가 지배되는 사회풍토가 이룩되어야 한다. 例로 이윤추구는 혁신을 통한 良質의 값싼 재화·서비스 공급에 의하여만 실현되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또는 負債가 있는 限 事業擴張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式의 사고가 정착되어야 한다. 大企業의 利點을 살펴 中小企業과의 전문화, 계열화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또는 기업의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투자가 사회·경제적으로 가져 올 수 있는 폐해를 충분히 인식한다는 것 등을 또 다른 例이다.

다른 한편, 一部 大企業의 無理한 행위가 시정될 수 있으려면 이를 위한 政府 및 消費者의 역할 또한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81년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발효되고 재벌집중을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84年 商法改正이 실현되었으나 그 이외에도 바람직한 方向으로 시장경제가 유도되도록 간접적인 태두리를 설정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있다. 또 일부 계층의 지나친 사치풍조나 높은 소비성향 역시 非生産的인 기업활동을 유인한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XIV. 남겨진 課題들

지난 30년 간, 보다 정확하게는 60년대 初以後 고도성장을 추구해 왔다면

이에 따라 부작용이나 불균형은 그만큼 누적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 中의 一部는 앞으로의 成長過程에 있어서 制約要因으로 登場할 것으로 보인다.

1) 對外指向的 成長의 再考

우선 對外指向的 成長과 관련하여 이를 지속할 것인가? 그렇다면 從屬的 발전을 의미하지나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발초기 여러 제약(資本, 技術, 천연자원 및 市場規模 등)으로 因하여 高度成長은 대외지향을 전제로 하였고, 급속한 輸出擴大政策의 추구에 따라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80년 初에 거의 80%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당초의 여건이 一部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특히 중화학공업 부문의 확대와 함께 다소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기조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또 발전전략에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무역의존도가 90%를 크게 상회하는 臺灣이나 「베네룩스」 3個國의 例에서도 볼 수 있듯이 質的인 운영 자체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출촉진의 취지는 생산, 고용의 증대 以外도 산업구조의 고도화, 나아가 경제적 自立度의 제고에도 있다. 그러나 최종재의 수출에만 力點이 두어져 온 결과 이러한 目的들이 크게 달성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한 例로 輸出의 수입유발도는 60년대 중반 이후 65%內外에서 줄곧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출이 확대되면 될수록 원자재, 소재, 중간재, 자본재에 대한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수출산업에 있어서 마저도 부문간 연관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국제수지의 개선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출부문과 수입대체 부문, 그리고 內需部門까지를 포함하는 균형있는 발전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對外指向的 成長戰略을 추구하는데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特定部門에 대한 특혜의 제공보다는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자극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 아래 간접적 유인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수출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하간 장기적인 次元에서 輸出의 발전, 나아가 성장잠재력의 배양을 위하여는 불균형적 성장론이 再考되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보며 그 대상은 단순히 산업내 부문간 뿐만 아니라 산업간, 또는 大企業과 中小企業間 등 경제 全部門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의 높은 對外依存도와 관련하여 주로 中南美諸國 경제를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종속적 발전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貧困」이라는 한마디로 要約되던 한국경제가 그간 양적으로 팽창하고 質的, 構造的 변모를 겪었다면 이는 중요 선진국(中心國)과의 去來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點이다. 輸出構造가 工產品中心으로 바뀌었으며 70년대 중반 이후는 선진국이 국내시장 교란을 이유로 한국으로부터의 중요 수입품목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加하고 있다. 中南美諸國을 비롯한 開途國의 경우와는 달리 一次產品의 국제시세 不安 내지는 下落에 따르는 立場條件의 악화도 없었다. 또 빠른 실질소득의 증가 덕택으로 선진국에 의한 경제적 잉여의 수탈로 인한 外的 소득격차는 오히려 좁혀졌으며 연구에 따라 다소 견해를 달리하기는 하나 국내 소득 분배의 불균형 또한 심화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흔히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 투자 역시 한국의 경우 총 도입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지나지 않아 다른 開途國에 비하여 例外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累積一路에 있는 막대한 外債나 특히 특정국에 대한 심한 경제적 依存이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극복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종속적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83년 末 현재 外債總額은 4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同年 GNP에 대한 구성비가 50%를 약간 초과하고 있다. 물론 大部分이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환능력이 문제며 지표의 선정에 따라서는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의 위험水位에 도달하고 있는 外債壓力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限—그리고 상업차관과 같은 경우 불리한 條件附加率의 利子支拂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所得流出을 의미하게 되고 결국 의존이나 종속이라는 망령을 떨쳐버리기는 어렵게 된다.

對外債務는 곧 국내 정부, 기업 및 家計 등의 負債를 의미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기업은 우선적으로 재무구조의 취약을 改善함으로써 원리에 입각한 생산활동을 추구해야 하며 그 以外 경제주체 역시 내림과 저축증대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

다음 특정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不均衡的 편중현상은 이중적으로 대외의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 예로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년간 兩國間 무역은 매년 例外없이 한국측의 赤字로 일관되어 왔으며 그 규모는

대부분 총 무역수지 적자총액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자본·기술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83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의 對外貿易收支赤字는 2,570백만「달러」인데 反하여 對日 貿易赤字는 2,881백만「달러」에 달하고 있어 美國 및 유럽제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흑자와는 좋은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不均衡이 去來上의 특수한 여건에 기인하겠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적 자립도의 제고가 갖는 국민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시정되어야 한다. 국제수지의 개선과 함께 시장다변화도 對外經濟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고 있다.

2) 경제적 안정의 의의

끝으로 高度成長에 따른 副産物의 하나로서 경제內 不安要素가 배태, 확산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70년대 末까지만 하여도 目標達成, 그리고 成長 일변도의 정책이 추구되어 왔으며 安定基調는 成長을 저해하는 줄로만 인식되어 왔다. 과도한 기대감, 의욕, 성취욕 및 열망 등과 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을 해왔으나 그만큼 부작용을 누적시켜 왔다. 年 16.1%(62~78) 및 26.6%(79~81)에 달하는 都賣物價上昇率, 과열, 투기, 소득분배의 不均衡, 국제수지 악화, 무리한 중화학 공업부문 투자, 大都市 集中 등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은 80년대 초에 이르러 지속적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등장함으로써 일종의 逆說에 빠지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 목표간 상호 조화를 이룬 균형달성이 실현되지 못하여 결국 當初 추구하던 目標마저도 充足시키기 어렵게 된 상태였다고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정기조의 회복, 정착은 또 하나의 근본적인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경제적 안정이란 단순히 물가억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기타 생산, 개인소득, 소비, 투자, 저축 및 이자 등 諸巨視 變數의 안정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또 그 취지가 모든 경제주체로 하여금 정상적인 경제변동을 예측케 하여 줌으로써 만족스럽게 그리고 보람있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주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일관성과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의 수행이나 총격적 조치의 회피는 물론, 넓게는 사회적 안정이 대전제가 되고 있음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그 밖에도 그간 경제내에 축적되어 온 불균형이나 부작용의 점진적인 시정 역시 안정기조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